

「화성 전지 공장 화재사고」 수사 현황 등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경기고용노동지청장 강운경입니다.

우선 ‘화성 전지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진행 중인 수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된 책임자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중입니다.

6월 24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면밀히 확인·분석하고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을 조사하고,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도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하여, 화재 사고 책임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화재사고 이후 61일째인 오늘, 전지 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증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증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6월 24일 화재 사고 전 발생한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 파견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간의 수사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해당 전지 제조업체에서 확인된 고용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파견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모두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해당 업체 내 사고 이외의 공장동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도 진행하여 법 위반 사항 65건에 대한 사법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재발방지를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고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직후인 6월 27일 동종 전지업체 130여 개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지도하고, 7월 29일부터 2주간 150여 개 전지업체에 대한 기획점검도 진행하였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16개 언어로 번역된 안전표지 스티커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개편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조만간 범정부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수사, 감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이번 사고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